

與 ‘팩트체크’ 가동...野 “해임안 재추진”

조국 공방 지속...여, 검찰 피의사실 공표 고발 검토 한국당·바른미래 “검찰 겁박해 수사 방해”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기로 검찰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연일 불을 뿜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여론 악화 차단을 위해 검찰 고발 방침을 재확인하고 ‘팩트체크’ 팀을 가동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25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검찰 고발 검토 방침을 계속 거론하고 나섰다. 검찰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수사 관련 내용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

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여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어 실제 고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것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같은 맥락에서 팩트체크팀을 통한 언론 보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조 장관 인사 청문회 때 꾸려진 원내 차원의 팩트체크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 ‘조국 사수’ 기조를 재확인 하면서 당내 이견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을 사실상 ‘손질’해야 한다는 발언 등이 나온 전날 비공개 의원 총회에서 조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로 조 장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국회가 정국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태도 변화 등을 감안해 해임건의안 제출 시점 선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자신이 주장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욱 기자 tuim@

한국당은 동시에 민주평화당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등 군소 야당에 조 장관 해임건의안 의결에 함께 해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로 조 장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여당이 ‘조국 사수’에 올인하고 있는 만큼 해임건의안 의결을 통해 국회가 정국 상황을 정리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논리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태도 변화 등을 감안해 해임건의안 제출 시점 선택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고발 방침을 비판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에서 “조국 장관을 구하기 위해 검찰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자신이 주장하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동욱 기자 tuim@

“평화의 길 열어”...“북한 바라기 정책”

진보 vs 보수 정당, 文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논평

문재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으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 것과 관련, 25일 여야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진보 성향 정당은 “평화의 길을 열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성향 정당은 “북한 바라기 대북 정책”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평화에 협력할 것을 제안, 북미대화의 동력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사회의 호응을 얻는 성과를 얻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여정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 위에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더 크고 깊게 내는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바라기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북한의 무기와 모욕, 안보 위협으로

이어졌다”며 “속 빈 유엔 기조연설은 국민에게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잘못을 지적하지 못한 채 북한의 체제보장 필요성만 강조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연설이고 무엇을 위한 연설인지 분별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남북을 가르는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조성하자고 제안한 것은 남북간 평화를 공고히 하는 데 국제사회가 힘을 보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지혜로운 제안”이라고 논평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의지를 강력히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남북 간 진전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보에 큰 틀에서 동의하는 데,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한반도 평화는 유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DMZ의 국제적 평화지대 구상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국 수사, 절차대로”

윤석열, 첫 공개 언급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 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 행사에 참석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 수장의 첫 외부 일정이라 관심을 끌었다.

윤 총장은 개회사에서 “마약 없는 건강한 지구촌 건설은 우리 모두가 꿈꾸는 세상”이라며 “국제사회의 공동 과제인 마약 퇴치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 없는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상시 가동되는 네트워크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마약 생산·유통지 관리, 국외 도피자 강제 송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조 방안이나 지원 시스템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마약 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범죄수익 환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누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연합뉴스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유시민 “檢, 정경심 영장 청구할 것...기각 땀 책임 뒤따라”

알릴레오 시즌2...“윤석열, 판단 돌아보고 검사로 행동해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4일 검찰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방배동 자택을 압수수색 할 당시 발부 받은 영장과 관련,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2에 출연해 “조 장관은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법적 지위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어디에 쓸지를

알기 어려운 서류를 좀 가져갔다고 한다”며 “또 하루종일 (조 장관) 아들이 주로 쓰던 컴퓨터에 붙어서 포렌식을 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련해서 “청구하리라고 본다”며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영장을 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법원을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상 국가에서는 발부 확률이 0%지만, (우리 법원은) 반반”이라며 “영

장기 기각되면 한 부장을 비롯한 특수수사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무엇을 하고, 언론 보도가 거기에 따라오고 마지막 국면으로 간다. 이제는 끝이야 한다”며 “윤 총장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가 한 지시와 판단을 돌아보고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검사로서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살아있는 권력은 법무부 장관만이 아니라 윤 총장도 있어야만 한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여론재판을 하고 대국민 심리전을 하는 와중에 시민 정경심은 약자”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조국 장관, 평검사 13명과 도시락 대화

천안지청 방문...“검찰개혁 진솔한 얘기 청취”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사와의 대화’를 위해 대전지청 천안지청을 찾았다. 검사와의 대화는 검찰 제도 개혁 등에 관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지난 20일 의정부지청에 이어 두 번째다. 천안지청은 지난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과로로 쓰러져 숨진 이모 검사가 근무하던 곳이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천안지청에 도착했다. 그는 대기 중인 취재진에게 “형사 공판부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故) 이모 검사를 언급하며 “국민들에게는 덜 알려졌지만, 이 검사는 30대의 나이에 매달 수백건의 일을 처리했고 한 건의 미제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가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은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듣는 자리”라며 “어떤 주제도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의견을 듣고, 법무부에 돌아가 향후 정책 논의를 할 때 반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검사-직원과의 대화는 1차 의정부지청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은 채 자유 토론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오전 10시부터 4층 중회의실에서 수사관 등 직원 20명과 차를 마시며 1시간가량 검찰 제도와 조직 문화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수사관들은 조 장관에게 인사와 복직 문제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장소에서 평검사 13명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검사와의 대화는 오후 1시까지 진행됐다.

조 장관은 오후 1시 10분께 청사를 나서면서 “현재 마련된 검찰개혁 방안, 형사 공판부 우대 강화 방안, 직원의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진솔한 얘기를 들었다”며 “제가 주로 경청했고, 들은 얘기를 취합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개선안을 만들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원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 강 의 료 | 210,000원(15주) *선착순 50명

▶ 조 선 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9-145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입인을 위한 주민의견청취공고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소촌동 공동주택
 - 위 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446번지 일원
 - 면 적 : 28,933㎡ (공동주택 : 25,381㎡, 도로 : 3,552㎡) (제2종일반주거지역26,510㎡, 제2종일반주거지역2,423㎡)
2. 공람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9. 9. 26. ~ 2019. 10. 10. (15일간)
 - 장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 어룡동 행정복지센터
 - 의견제출 서식 : 공람장소 비치
3. 주민의견제출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
 - 제출방법 :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서 면으로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주택과(062-960-86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7년

77 광주일보

창사67주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이농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흥 266-1960	·북광주 525-3761
	·신 안 222-8171	·암 산 571-7658	·오 치 266-7601
	·용 봉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충 정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하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무 372-2352	·서광주 369-1625
	·문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밀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9-1500	·광 선 944-0444	